

엠펙스 환자누적 13명...“국내 감염 추정”

3명 모두 해외여행력 無...국내위험 노출력 확인 방역 당국 “위험요인, 감염경로 등 역학조사중”

엠펙스(MPOX·원숭이 두창)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3명 모두 해외 여행력이 없어 국내 감염으로 추정된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0번째 확진 환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3명의 엠펙스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누적 환자 수는 13명이다.

11번째 환자 A씨는 서울 거주 내국

인으로 인후통과 피부 병변으로 의료기관에 내원 후 진료 의료진이 엠펙스 감염을 의심해 지난 14일 관할 보건소로 신고했으며 검사 후 확진 환자로 14일에 판정받았다.

12번째 환자 B씨는 경남 거주 내국인으로 피부병변 및 통증으로 지난 14일 질병청 콜센터에 검사를 문의한 후 검사 후 15일에 확진 환자로 판정받았다. 13번째 환자 C씨도 경남에 거주하

는 내국인으로 B씨 역학조사 중 피부 병변 등 의심 증상이 있는 밀접 접촉자를 확인해 즉각 검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15일 양성으로 나타났다.

신규 확진 환자는 모두 최초 증상 발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으며 국내 위험 노출력이 확인돼 국내 감염으로 추정된다. 이에 방역 당국은 위험 요인, 감염경로 등에 대한 상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질병청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확진 환자의 의심 증상, 임상경과, 특성, 발생 동향 등을 포함한 엠펙스 진단 안내서를 배포했다.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

내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항문외과 등 피부병변을 진료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의심환자 신고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당국은 고위험군 이용 시설을 방문해 감염 예방수칙 준수 안내, 고위험군 대상 안내문 제작·배포 등 홍보를 강화해 추가 확산 억제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의심 환자와의 밀접 접촉 등 위험 요인과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청 콜센터로 상담하고, 모르는 사람들과의 밀접접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유나기자



여수해경, 보관 중인 헌혈증 기부받아 기증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단체헌혈과 함께 직원들과 시민들이 보관 중인 헌혈증을 기부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담양경찰,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집중단속 실시

담양경찰서(서장 박송희)는 17일 담양군 담양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광양소방, ‘오늘은 나도 영웅이!’ 포토존 제작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SNNC의 500만 원 사업비 지원으로 시민 소통, 공감을 위한 영웅이 포토존을 제작했다고 전했다.

광양=김현근기자



강진소방, 성전면 기관·단체장 대상 119소방안전체험

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는 11일 성전119안전센터에서 성전면 기관·단체장 20여 명을 대상으로 119소방안전체험 및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광주 동부소방, 중요 목조건축재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송민영)는 지난 17일 운림동 소재 중심사에서 중요 목조건축재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완도소방, 노화 광업소 찾아 ‘관저장 안전컨설팅’ 실시

완도소방서(서장 김옥연)는 최근 관내 광산 대상으로 안전컨설팅 및 붕괴사고 시 구조요건 등을 파악하기 위해 민경산업(주) 노화도 광업소를 방문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전처·불륜상대모·동거녀 살해 ‘사이코패스’...무기징역 확정

1·2심 모두 무기징역...대법원, 원심 확정

전처와 불륜 상대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두 번이나 중한 처벌을 받고도 또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이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형,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강원 동해시에서 동거녀 A씨를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동해시의 노상에서 우연히 술을 마시다가 만나 동거를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말다툼이 시작됐고, 화를 이기지 못한 이씨는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는 2001년에도 같이 살던 전처 B씨가 더 이상 같이 못살겠다며 헤어지자고 말하자 살해한 죄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씨는 2009년 2월 가석방된 뒤 베트남으로 넘어가 현지 여성과 재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얼마 못 가 다른 베트남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고, 결혼을 반대하는 불륜 상대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 받은 이씨는 약 8년5개월간의 복역을 마치고 2020년 출소한 뒤 대한민국으로 추방됐다. 그러나 추방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고위험군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성격장애)’ 검사에서 높은 점수가 나왔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이 32점으로 희대의 살인마로 불리는 유영철 38점,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29점, 연쇄살인범 강호순 27점 등과 고위험군에 속했다.

1심은 “피해자를 살해한 수법과 내용이 잔인하고 혹독해 죄질이 극

히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전에 2번의 살인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처벌 종료 시와 재범 사이의 간격이 짧다”며 “피고인에게서는 형벌로 인한 예방적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사회에 복귀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살인죄는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수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김재환기자



유치원 대신 ‘유아학교’로 유아학교명칭변경 추진연대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변경 위한 유아교육법 조속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육아휴직 불이익 막자”...사업장 500곳 집중감독

신고센터 설치, 6월30일까지 신고 독려도

고용노동부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17일 고용부는 오는 19일부터 출산·육아휴직 사용을 제한하거나 불리한 처우 등이 의심되는 500개 사업장을 선정해 상반기 집중 감독한다고 밝혔다. 출산휴가 대비 육아휴직이 저조한 사업장이나 휴직 중 부당해고의 의심되는 사업장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에는 이를 토대로 위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 감독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감독 외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19일부터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를 받는다. 신고가 접수

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행정지도하고, 이후 개선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근로감독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근로감독도 제도 취지에 맞게 개선된다. 근로감독에 앞서 근로자 및 노동조합 대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등을 대상으로 법 위반사항과 조직문화 등을 미리 파악하고 여성이 다수 고용된 업종은 교대제나 직무성격 등 특성을 감독과정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조직문화를 진단해 개선을 지도하고,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안내해 사업장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 사항인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

항이 제대로 규정돼 있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차 회의에 따른 것이다. 당시 이 정식 고용부 장관은 출산·육아휴직 등 현행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업장 여건과 불이익 우려에 이번 근로감독을 집중하고, 모성보호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노동현장이 개선되도록 힘쓰겠다”며 “법이 보장하는 출산·육아휴직 등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국내 일당 2명 구속해

서울 강남구 학원가에 피진 ‘마약 음료’의 제조·전달책과 번호조작책 등 국내 일당 2명이 17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김모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모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한국인 이모씨로부터 마약음료를 제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에 고개를 끄덕이고 호송차에 탑승했다. 김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김씨는 범행에 쓰인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강원 원주 지역에서 직접 제조한 후 사건 당일 퀵서비스와 고속버스를 이용해 시흥 행사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전달할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마약 음료가 담긴 병이 중국에서 반입됐으며, 김씨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 받은 마약을 우유 등과 섞어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이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휴대전화 번호 조작 장비를 설치·운영할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오후 4시41분께 강원 원주에서 김씨를, 당일 오후 2시48분께 인천에서 김씨를 각각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한국 국적 20대 이모씨와 중국 국적 30대 박모 등 두 사람이 김씨에게 이번 마약 제조·배포 및 보이스 피싱 범죄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국내 마약 판매를 통해 마약 음료가 제조된 필로폰을 김씨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30대 A씨 등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이다.

이슬비기자